



수원시의회  
SUWON CITY COUNCIL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S U W O N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일시** 2018. 2. 28.(수) 14:00~16:00

**장소** 수원시의회 세미나실(4층)

**주최|주관** 수원시의회 · 수원시정연구원



- 진행순서 -

시간		소요 (분)	내용	비고
부터	까지			
		120'		
14:00	14:02	2	개회선언	사 회 자
14:02	14:05	3	내빈소개	사 회 자
14:05	14:10	5	인 사 말	조 명 자 의 원
14:10	14:30	20'	<b>발제)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의의</b> (수원시 의원, 조례 발의자)	조 명 자
14:30	14:50	20'	<b>발제) 민주시민교육 실행의 흐름</b> (안산YMCA사무총장)	이 필 구
14:50	15:10	20'	<b>발제)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실행에 대한 제안</b>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양 훈 도
15:10	15:55	45'	<b>종합토론</b> -좌장 : 민진영(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토론자 4인
			-김성연(수원민주시민교육협의회 '빛길') -송준호(수원희망교육시민포럼 대표) -오세창(성남민주시민학교 공동대표) -김도영(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15:55	16:00	5'	정리 및 폐회	사 회 자

\* 사회자 : 이태현(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팀장)

- 발표자 및 토론자 -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위
좌장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발표자	조명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필구	안산YMCA 사무총장
	양훈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토론자	김성연	수원민주시민교육협의회 '빛길'
	송준호	수원희망교육시민포럼 대표
	오세창	성남민주시민학교 공동대표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 Contents

## 1 주제발표

1.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의의 (조명자) ..... 01
2. 민주시민교육 실행의 흐름 (이필구) ..... 11
3.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실행에 대한 제안 (양훈도) ..... 23

## 2 종합토론

1. 사례로 보는 수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고민 (김성연) ..... 31
2.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송준호) ..... 37
3. 성남시 민주시민교육 사례 및 제언 (오세창) ..... 41
4. 민주시민교육, 이제 민주시민학습으로 (김도영) ..... 47

주제발표 1

#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의의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 조 명 자



#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 (조명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

발의연월일 : 2018년 1월 일

발 의 자 : 조명자 의원 등

찬 성 자 :

### 1. 제정이유

-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수원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가치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나.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 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라.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마.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5조)
- 사.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 아.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 자. 민주시민교육의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 차.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법교육지원법」

수원시 조례 제 호

##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수원시 민이 세계시민이자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생활을 하여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제4조(적용대상)

-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 ②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시장의 책무)

-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자원 및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3.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6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7조(재정지원 등)**

-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민주시민교육의 이수)**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9조(교류협력)**

-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 교육기본법

##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 평생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 법교육지원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4.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5. 법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6.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회 법교육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법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법교육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주제발표 2

#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안산YMCA 사무총장 | 이 필 구



# 민주시민교육<sup>1)</sup>의 방향과 과제

## —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이필구 (안산YMCA 사무총장)

### 1. 한국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의 역사를 거슬러 가다보면 일제 시대에 창립된 YMCA(1903년)와 홍사단(1913년)이란 사회운동 단체들이 시민교육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단체들은 창립 시기부터 농촌계몽을 위한 농민교육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토론학습 등을 전개했고,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뒤 정부는 ‘민족적 민주주의 교육’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교육하기보다는 준법정신이 강하고 애국하는 충성스런 국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의미로 강조됐다.(김미란, 1998)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오랜 기간 이른바 ‘국가주의적 정치교육’이 전 사회적으로 실시됐다. 이 또한 진정한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으로 볼 수는 없다. 심지어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교육활동은 위협시되고 억압을 받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민주시민교육 활동의 맥은 면면히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김신일(1994)은 우리나라의 정치교육의 전개과정에서 해방 직후와 1960년대에 잠시 동안 민주시민교육이 강조되고 시도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기간에는 정부 주도의 국가주의적 또는 정권안보 지향적 정치교육으로 일관됐다고 정리한다. 또 소수이기는 했지만 민간 시민단체들과 정권비판운동 단체들 그리고 학생운동이 좁은 정치적 공간 속에서도 시민정신을 끊임없이 일깨운 것은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후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활동도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급속한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대두됐고, 이 문제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창립을 필두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겨났다.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이념·의제·활동방식은 천차만별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즉 시민단체의 활동과 민주시민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지금은 정치·경제·지방자치·문화·여성·인권·반부패·소비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민주시민교육들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1) 영국·프랑스는 ‘(Civic Education)’, 독일은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 일본은 ‘공민교육(公民教育)’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교육’이라는 용어가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 즉 정치체제와 관련된 관치교육으로 잘못 이해되었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민주시민교육은 인권, 준법, 환경, 통일 등 그 시행 주체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2) 한국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교육의 독특한 조건으로 군사독재, 고속 경제성장, 민주화, 세계화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압축성장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시행주체와 내용이 민중교육,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기본적인 관점 역시 파울로 프레이리의 ‘피억압자의 교육’으로 불리던 민중교육의 관점에서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관점과 방법, 평생학습과 학습공동체의 관점이 중첩되어 나타났다.

1990년 중반 이후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 간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시민교육의 각 영역을 포괄하여 민주시민교육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의 흐름이다. 97년 10월 30일 민주시민교육지원법과 2000년 1월 3일 시민교육진흥법안이 의원 발의되었으나 의원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체는 학자그룹 중심의 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시민단체연대기구인 민주시민교육포럼, 김대중 정부 하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민주개혁국민연합이 중심이 된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이다. 또한 1998년 전국 시민단체들 간의 협의체인 ‘시민단체협의회’는, 산하에 시민정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법·제도 마련,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문지도력 양성,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담론형성을 위한 소식지 발간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송창석, 2004) 또 한편에선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과거 관변 단체로 불리던 자유총연맹이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1998년)하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보수든 진보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 2010년 6월에는 보수와 진보, 공공기관 및 학계의 대표적인 민주시민교육 단체들이 결합하여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를 결성<sup>3)</sup>하였다.(『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심정보, p. 170)

2000년대로 넘어서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제도권으로 확산 되었다. 선관위 선거연수원이 민주시민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는가 하면,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민주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기도 하고, 2000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센터, 2001년부터 시작된 평생학습센터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이 대학으로 발전하면서 2011년부터는 경희대의 경우 후마니타스칼리지(시민교육) 과정을 교양필수로 만들면서, 대학 안에서 시민교육이 실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하나의 흐름은 2010년부터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의 민주시민교육 추진에 따라 경기도, 충북, 전북, 전남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3년부터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북,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수원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정의되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시민교육포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안)’에서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식을 함양하고, 각 분야에서 민주적 참여와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등 민주시민의 자질을 절차적으로 학습하는 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013 시민교육 심포지엄』자료집 p. 25) 또 서울대학교 한승희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을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 이념, 사고, 행동 등을 형성함과 아울러 그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교육의 과정”, “국가의 일방적 정치사회화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비판적 성인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한다.(한승희 2002) 이외에

3)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 주요참여단체는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선거연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민주공원,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한국YMCA, 흥사단, 경실련,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선거시민모임, 볼런티어21, 열린사회시민연합 이다.

도 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교양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등 더욱 다양하게 정의되고 진행되고 있다.

## 2. 왜, 민주시민교육인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가 2014년에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중간지원조직인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경기도 역시 2년 전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하고,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성남, 광명, 안양, 의정부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지역별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결성 되는 등 어느 때 보다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표1 / 지방정부 및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정된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제5930호)\_20140109
-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제4855호)\_20150303
- 경기도민주시민교육조례(제5036호)\_20151013
-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제2929호)\_20151111
-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제2718호)\_20160218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제4227호)\_20160318
-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4240호)\_20160325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제3903호)\_20160520
-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제2729호)\_20170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제1256호)\_20170323
-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익찬 발의)\_20170605
-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_20180109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 및 지역별 연대활동 역시 과거에 비해 눈부실 정도다.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결성되었고, 경기도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추진 주체들간 논의과정을 거쳐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발족하려는 준비모임이 구성 중이다. 안양, 광명, 성남, 수원, 안산 등도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나 협의회 라는 명칭으로 민주시민교육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연대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주요 시민사회단체, 교육단체 등이 연대해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시민교육이 전국적으로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416이후, 촛불혁명 이후 시민의 욕구와 이해가 다변화 되면서 지역에 기반 한 시민정치, 시민자치 운동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3년이 지난 2017년 촛불혁명은 한국사회에 큰 물음을 던진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는 숨 가쁘게 달려온 한국사회에 세월호 이후라는 큰 과제를 던져 주었다. 당시 “가만있어라.” 는 말은 한국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가 되었고, 가만있지 않는 사회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17백만 촛불이 평화적 시위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만들면서, 국가는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 물음을 전 사회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교육자치 영역에서 점화되었고, 혁신지방자치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화 전략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역시 국가 및 사회운영 시스템을 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체계를 구상하고 실현시키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둘째는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틀인 제도를 만드는 것은 주력했지만,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복합적 위험사회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벡 교수는 근대화 이후 발생한 대형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21세기가 안겨준 위험을 민족국가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 도처에 널려있는 문제들은 지구적(global)이면서도 동시에 지역적(local)"며 "지구적, 국가적, 도시적, 지역적인 문제가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급격한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존 공동체적 가치와 작동원리가 무너지면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의 힘으로 선택하고 구성해야 하며 그런 만큼 더 위험해 진다는 것이다. 이런 성찰적 현대화가 야기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산업 사회의 문제를 관리하는 낡은 정치 모델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 정치의 개혁 또한 중요하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이전에 정치의 장 외부에 있던 하위 정치 영역을 성찰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시민사회운동 진영 내 운동 방향과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공동 목표는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 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부 시민교육운동 진영이 독일식, 미국식, 스웨덴식 시민교육을 연구하며, 크고 작은 실천 활동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시민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지난 15년간 3-4차례, 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재까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 제정되진 못했지만, 한국사회 내 새로운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의 실험을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토대를 만들기 위한 방향과 전략이 시민사회 전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는 시민운동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지역에 기반 한 시민사회라는 토대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민주주의 위기는 늘 반복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민주시민교육은 촛불혁명 이후, 자치분권 시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는 그릇으로서, 시민참여 전략으로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리되는 핵심 키워드는 지역, 자치, 협치, 공공성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판을 짜고, 이에 기반한 연결망, 관계망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시민교육이 현재 고민되고 있다. 또한 문제 해결형이 아닌, 토대 구축형으로서 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이 연구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3. 촛불혁명이후, 자치분권시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여러 변곡점이 있었지만, 또 한 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2016년 촛불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불확실성 시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향하는 데 민주시민교육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서구에서 먼저 시행한 민주시민교육의 장점을 우리 사회에 맞게끔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민주시민교육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국 상황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영역에 대한 쟁점을 우선 정리해야 한다. 서구에서는 대체로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더라도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과도 따로 구별하지 않는 편이다. 게다가 학교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 견지 위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서구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자생적·순차적·전 방위적으로 발전한 시민교육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평생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학교교육에서의 시민교육이 서로 다른 것처럼 규정되고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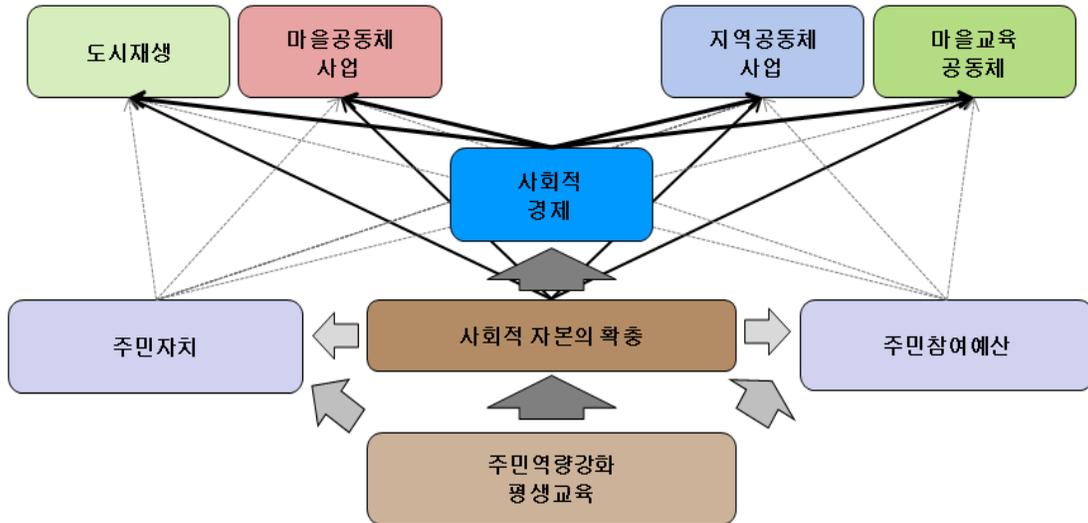
이러한 구별의 근거에는 그동안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기본이념으로 천명했을 뿐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 놓여 있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이 있을 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말처럼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에 시민성을 일깨울 수 있는 기제가 작동하도록 합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이를 위해서는 각 영역을 뛰어넘는 융합적 관점이 요구된다.

2016년 촛불 이후의 새 정부 들어 국정과제 전반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모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중앙 중심 ⇒ 지역 중심>으로, <정부 중심 ⇒ 민간 중심>으로, <행정 중심 ⇒ 거버넌스 중심>, <보조금 지원중심 ⇒ 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제시되면서 이 흐름에 맞는 틀과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런 기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치분권이라 할 수 있다. 올바른 자치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주민자치, 교육자치라는 관점에서 각각의 영역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유기적,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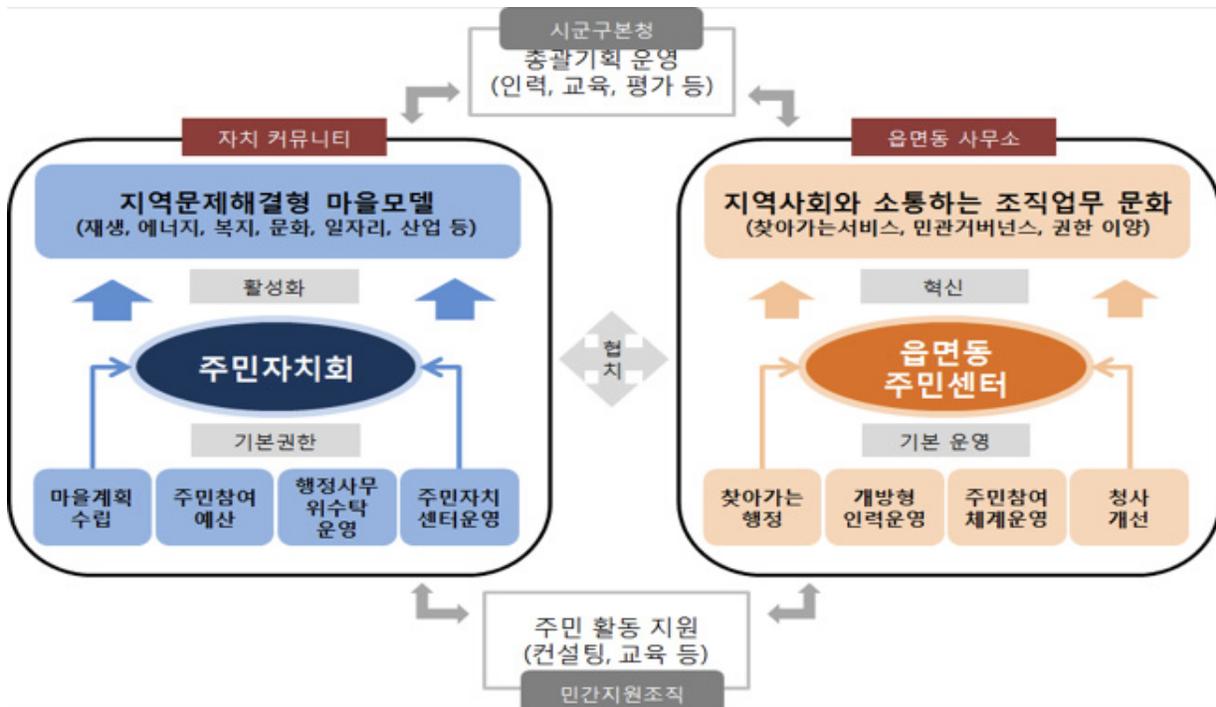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와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아래 표2를 보면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참여예산제, 평생교육과 연계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시민사회 토대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표2)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연계



마을 운동 쪽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현재 어려움은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혁신읍면동 사업 역시, 동을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회를 구상하고 있고, 이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마을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마을중심정책으로 정리되는 정책방향은 동을 중심으로 복지와 자치 시스템을 주민들과 함께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해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치분권의 방향을 담고 있다. 현재 마을 운동진영은 마을비전, 마을계획, 마을재생의 단계를 세우고 이를 주민참여예산제와 연동하는 구상도 갖고 있다.

표3) 혁신 읍면동 모형



## 2) 주민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어야 한다.

위에 소개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는 도시라는 큰 틀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비전을 갖고 이를 실현할 주민 주체를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추진과정에서 주민에게 주도권과 권한을 줄 때 가능하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라는 말이 있다.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주민참여 제도의 가짓수는 늘어났는데,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많다. 주민발의가 활발해 졌는데, 발의를 해도 지방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규제 조항이 없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시행의 문제가 많다. 이런 제도들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분권의 국가 정책에 맞춰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자치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주는 정책을 제도화 해야 한다. 예산이나 조례는 하나의 수단이다. 시민사회가 하던, 행정이 하던 예산을 쉽게 해석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소수의 사람만이 예산서를 볼 수 있는 정도여서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줘야 한다. 조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참여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명석을 깔아 놓고, 명석에 올라서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 하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잘 안 보이는 것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가 이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권한을 시민들이 갖는 것이다. 미국의 로체스터시의 '마을을 만드는 이웃들' NBN(Neighbors Building Neighborhood) 과정도 공무원이 마을회의에서 하는 일은 장소를 잡고, 불을 켜고 끄는 역할이다. 나머지는 주민들이 모여서 하고, 주민들이 논의하다 막힐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행정이 지원을 하기도 한다. 지방예산에 관심이 없다가도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돈을 써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 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다.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는데 자꾸 하라고 하면 힘들 수 밖에 없다. 지역과 구조를 알아야, 하고 싶은 것도 생긴다. 이해관계를 알아가 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살아가면서 각각의 사안에 대해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다. 이해 관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를 충분히 드러내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함께 구상하는 과정, 그 자체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이를 자각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민주시민교육이다.

## 3) 교육 자치,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화 전략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종합예술'과 같다. 그리고 어느 한 단체나 운동영역이나 의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여러 영역에 산재된 민주시민교육의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통합시켜야 한다. 다양한 영역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행정, 시민단체 혹은 학계의 관점일 뿐이다. 시민의 일상생활은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의 종합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영역별 교육 간 연결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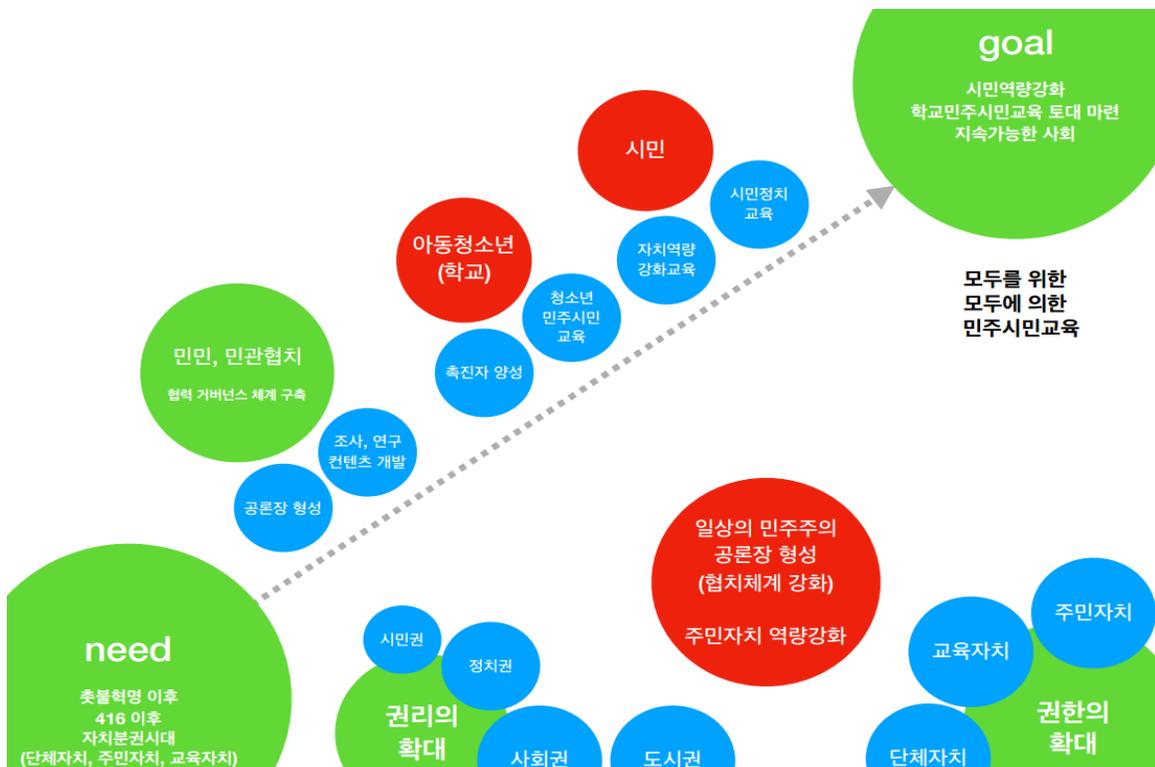
을 실시하는 단체 간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정리하고, 교육방법을 통합해 가는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학생 자치, 학생 인권에 기반 한 민주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운동영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상을 갖고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시도를 꾸준히 진행하였다. 여수시에서는 교육자치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협치를 통한 지역교육문제를 모두의 과제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천인문의 관점에서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시민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하는 전통적 방식의 민주시민교육도 필요하지만,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시민교육의 명확한 꼭지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카데미교육, 학습공동체 방식의 시민교육은 꾸준히 지속적인 지원과 주제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행되어야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이런 활동으로만 한정지어선 안된다. 오히려 아카데미 방식은 명확한 대상을 정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공무원, 지역오피니언리더(주민자치위원, 통장, 입주자회 등)을 대상으로 시민의 권리를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 시민은 교육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닌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생산하는 생산자(생활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이 자치와 분권의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다음의 그림처럼 하나의 방향으로 모두를 위한 그리고 모두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은 가능해 보인다.

표3)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민주시민교육



## 4) 민민,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와 ‘시민’ 그리고 ‘교육’이라는 세 단어가 융합된 용어이다. 민주는 공공사회라는 지향을, 시민은 이런 사회를 운영할 시민의 역량을, 교육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후변화, 세계화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시대에 공공성은 무엇이며, 이런 판단을 내릴 시민은 어떤 교육으로 양성될까?”는 모두의 과제일 수 밖에 없다. 모두의 과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모두를 위한, 모두의 의한 민주시민교육은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때 실제화 될 수 있다.

이런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큰 숙제이다. 거버넌스 체계 안에 행정과 시민사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은 묘한 긴장 관계와도 같다.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민에 기반한 중간지원조직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위상이 사회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을 리드하면서 주민 주도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지만 행정이 주도하고 중간지원조직이 이를 수행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중복된 행정처리 체계를 하나 더 만드는 결과여서, 이를 넘어서야 변화의 과정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사회 간 신뢰를 쌓기 위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은 단기간의 성과중심으로 평가 할 수가 없다. 잘 되는듯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없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긴 호흡으로 축적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만 계속 물을 붓는 것이 중요하고, 왜 물을 부어야 하는지에 대해 민관이 납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납득의 과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라는 두 축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흐름을 읽고 지역현실에 맞는 민주 시민교육 정책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융합적 관점도 필요하다.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과제가 다른 영역이 아닌, 연결 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점과 점이 연결되어 선이 되듯, 현재는 선과 선을 연결해 그물망을 만드는 추세이다. 주민들의 성장을 돕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 결정 권한을 가지고 직접 그 일을 하는데 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될 때 지역 내 다양한 거점이 형성되고 거점간의 연결을 통해 운동 모델이 만들어진다. 한국 민중교육의 산증인인 허병섭 목사의 “그들을 위해 외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게 하라”는 외침을 다시 곱씹어 볼 때이다.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행동할 때 주체가 형성되고 결국, 그 주체가 있을 때 실질적 변화는 일어난다.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다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제를 운영할 시민은 누구인가? 어떻게 양성되는가? 정답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논의가 확산되고 축적되길 기대한다.



주제발표 3

# 수원형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언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 포럼 회원 | 양 훈 도



# 수원형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언

양훈도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 포럼 회원)

## 들어가며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형식적 민주주의도 이루었으나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척은 더뎠기 때문이다. 일천한 시민사회의 경험을 성숙시키려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의 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민주시민교육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도 90년대 말에 시작되었으나, 공전을 거듭했다. 이미 15대 국회부터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이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개념과 교육 목표·내용을 두고 정치권 내부에서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고,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내지 못했다.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은 2010년대 들어서야 본격화되었다. 학교교육에서는 2013년 경기도교육청이 민주시민 교과서를 처음으로 발행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교과목으로 채택했다. 이어 2015년 서울시와 경기도가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했고, 성남, 광명 등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들도 잇따라 조례를 통과시켰다.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 역시 2018년 초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이하 수원시 조례)를 제정했다. 수원시 조례는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이 2016년부터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시의회 내부 사정 등의 이유로 2년 가까이 지체되었다.

조례를 어느 지자체가 먼저 제정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조례는 만들었으나 교육체계를 둘러싸고 진척이 없거나 잡음만 무성하다면 의미가 없다. 훌륭한 조례가 훌륭한 교육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원시 조례가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이어져, 수원시가 몸집만 큰 지자체가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선도적으로 심화시켜 나가는 지자체가 되려면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하며, 실행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sup>4)</sup>

##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관한 소고

수원시 조례는 앞선 사례가 있었기에 역설적으로 더 다듬어질 수 있었다. 수원시 조례는 서울과 경기도, 성남시의 조례를 분석하여 각 조례의 장점을 최대한 종합 수용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듯이 좋은 조례가 좋은 교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바이마르 헌법은 허약한 공화국의 허울이 되었을 뿐이다.

4) 필자는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 포럼'(약칭 일바시)의 회원이다. 일바시는 2015년부터 지역사회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고민하는 연구자·교사·시민단체 활동가가 느슨한 네트워크 형태로 결합한 조직이다. 일바시는 2016년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초안을 검토하여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례 제정 과정에서 참여와 견제의 역할을 했다. 필자는 일바시의 구성원이지만, 이 글에서 제시하는 제언은 일바시의 집약된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 소견일 따름이다.

현 시점에서 수원시 조례의 완성도를 논하기는 어렵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뚜렷한 상을 그려나가는 데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방향, 내용과 형식은 여전히 열려 있으므로, 수원시 조례의 미비점은 향후 논의와 실행 과정에서 수용하여 고쳐 나가면 된다. 관건은 그럴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느냐와 여건 조성의 성패에 달려 있다 하겠다.

수원시 조례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책무가 시장에게 있다고만 명시한 점이다. 필자가 회원인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 포럼'(이하 일바시)은 2016년 수원시 조례 준비 과정에서 시장의 책무 못지않게 시의회의 책무를 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일바시는 시장의 책무(수원시 조례 제5조)에 이어 시의회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하자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시장과 협력하여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바시가 시의회의 책무를 두자고 한 이유는 시민교육이 본디 입법부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정치교육의 책임을 행정부보다 입법부가 지도록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은 행정적 측면이 두드러지므로 시장의 책무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이 정착되려면 시의회의 견제와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예산의 배정, 교육의 적절성 판단, 교육효과의 판정 등에 시의회가 적극 나서야 민주시민교육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앞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실행'이라 하지 않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이라고 한 점에 각별히 주목해주시기를 바란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지자체 집행부는 어디까지나 지원자이지, 실행의 주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교육의 실행 주체가 되면, 민주시민교육조차 '위에서 아래로' 민주시민을 규정하여 교육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민주주의 원칙은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 집행부의 임무는 이 원칙에 충실한 교육이 자율적으로 실행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sup>5)</sup>

과묵한 필자로서는 시의회의 책임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입법 상의 제약일 수도 있고, 행정과 입법의 책임을 병기한 선례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만, 시의회가 부담을 덜기 위해 책임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를 바란다.

수원시 조례 제9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조항도 일바시에서 당초 제안한 내용보다 후퇴한 느낌이다. 일바시는 수원의 실정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초기 단계에서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민간 중심으로 구성되기를 바랐다.

일바시는 수원시의회가 수원의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한 위원 5인,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관계자 2인,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부시장 및 시의 실무지원 책임 공무원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막상 통과된

5) 관련하여 각 지자체의 조례명이 '민주시민교육 조례'인 점은 아쉽다. 지원의 당사자이자 책임자임을 명확히 밝힌다는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가 낫다고 본다. 물론, 수원시 조례의 제1항 '조례의 목적'에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수원시 조례의 9항은 다음과 같다.

####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으로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3.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바시의 제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현실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통상 관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도 인정한다. 수원시 조례 제9조 ④항 성비 조문은 일바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바시의 제안이 무엇을 우려했는지를 헤아려, 초기 자문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시와 시의회가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당부한다.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했듯이,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는 교육 실행의 자문 기구가 아니라 교육 지원의 자문 기구가 되어야 한다. 특히 1기 자문위원회는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교육 실행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므로, 결코 형식적인 자문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구성하여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거버넌스 체계부터 서두르자

수원시 조례는 우려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앞서 제정된 타 지자체의 조례보다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조례의 내용보다 절차상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수원시 조례도 입안에서 통과까지 두어 차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고, 일바시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그러나 지난 2년 여 동안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불과 2~3차례에 그쳤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틀을 갖추려면 시민사회와 시 행정, 시의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교육 대상 시민의 범주를 지정하여, 원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하향식은 민주시민교육이라 할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은 이미 서두에 언급하였다. 수원시 민주시민교육의 틀을 갖추는 현 단계에서 거버넌스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하향식 교육의 타성을 벗어나는 일이 민주시민교육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지켜온 하향식 교육을 추가하느니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나을 듯하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 논의가 지난 20여 년간 큰 진전 없이 헛바퀴를 도는 동안 분야별 교육은 나름대로 발전해왔다. 환경, 인권,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등 관련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지하게 자신들의 활동영역의 교육 문제를 고민하면서 진전시켰다. 수원만 해도 몇몇 분야 교육 센터가 만들어졌거나 가시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안다.

문제는 분야별 교육이 각개약진하면서 민주시민교육도 방금 예시한 여러 분야의 교육 가운데 한 분야 정도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교육이 넘쳐 날 지경인데 또 무슨 교육을 한다고? 왜?’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 어찌 보면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이자 주인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되찾는” 데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주 관심은 “시민들이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기 영향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다.<sup>6)</sup> 한마디로, 민주시민교육은 각 분야 교육의 기본 토대이자 종합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단지 교육 분야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초 필수 교육이라는 의미다. 비유하자면, 상황과 여건 탓에 기초 필수과목을 세부 전공과목보다 뒤늦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 아닌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원시 민주시민교육의 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를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식의 혼란과 오해를 넘어서는 지름길을 거버넌스를 통해 찾아내야 한다. 더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입맛대로 해석하여 민주시민교육 자체를 불온시하는 그릇된 관점이 엄존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돌파해내는 길도 거버넌스에서 발견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거버넌스가 튼튼해야 부당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분명 기본적으로 ‘정치’ 교육이지만, 이 때 ‘정치’란 현실 정치가 아니라 가장 광의의 정치로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 더욱 튼튼한 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정확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또 하나의 교육 영역을 설정하기보다는 기존 수원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가는 여러 교육 분야를 지원하는 쪽이 낫다는 견해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오해’에 기인한 발상이 아니라 교육의 실효성에 주목하는 견해라고 판단된다. 필자는 민주시민교육을 ‘또 하나의 교육’으로 볼 게 아니라 독립된 기초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 입장이지만, 차라리 세부 영역 교육을 지원하자는 주장에도 현실적으로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sup>7)</sup>

수원시 조례도 제6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의 ①항에서 정치교육 뿐 아니라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교육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의 바탕 위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차라리 민주시민교육에 투입할 노력과 재원을 각 분야 교육의 지원에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6) 이호, “토론과 지역 공론장”,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 토론회 자료집, 2016). 이호는 영향력 강화(empowerment)를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최소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태’고 규정하며,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란 ‘함께 일하는 능력, 회의하는 능력,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는 능력,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일’로 규정한다. 역량 강화는 단지 능력의 신장에 그치지 않고 ‘나’의 이해를 ‘우리’의 이해로 조정해 실제 참여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7)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나아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육을 신설해 교육 담당 인력을 지역사회의 '외부'에서 공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교육을 개척해 온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의 지원을 바라고 교육을 진행해온 것은 아니지만, 조례의 지원 하에 각 영역의 교육까지 모두 흡수하는 민주시민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각 부문 교육은 그만큼 입지가 좁아질 게 뻔하다. 수원시 조례 실행의 과정부터 수원시와 시의회,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인지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8)</sup>

## 민주시민교육은 실천 교육 중심으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논쟁성의 원칙이다. 논쟁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가 민주시민으로서 지향해야 할 가치와 태도를 선택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세계관을 스스로 만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성의 원칙이다. 교육의 내용 요소가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실천성의 원칙이다. 추상적인 교수-학습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의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실천 과정을 통해 그 한계와 오류를 지속적으로 극복해 나갈 때 지속가능성을 갖는다.<sup>9)</sup>

학교 민주시민교육도 교육 방법에 있어 실천성의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한다. 일반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시민들의 민주시민 의식이 발현되지 못하는 까닭은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배운 바를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별도로 배우지 않아도 이미 '나'와 '우리'가 주체이자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자각하고 있다. 설령 그 이유를 자기의 논리로 표현해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추상적으로 가르치려 드는 일은 공허하다. 시민들이 영향력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의 기회와 장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교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라는 계몽의 신화에 갇혀 있다. 교육의 목표 가운데 지적 능력 신장을 통한 지위의 향상에 최우선 순위가 배정되기 때문에 교육의 방법도 지적으로 깨우쳐주는 데 치중한다. 그 영향으로 평범한 시민들은 교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광경을 먼저 떠올린다. 다양한 배움의 길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계몽적 교육 이외의 방식은 교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행히 민주시민교육을 앞서서 고민한 전문가들과 교육자들도 실천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는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민주적인가, 문제를 규정하는 힘과 해결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가를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천 경험보다 효과적인 교육은 찾기 어렵다.

8) 필자의 견해로는 민주시민교육의 틀을 형성하는 과정에는 지역사회 외부의 전문적 조력이 필수적이지만, 교육의 실행은 수원 지역사회를 잘 아는 '내부' 인력의 비중이 높아야 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9) 정경수, "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 민주 시민 교육", (앞의 자료집)

물론 어떤 실천이 바람직하며, 민주시민교육에 부합하는지는 이제부터 끊임없이 찾아나가야 할 과제다. 단순한 생활윤리의 실천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실천이어야 한다는 점은 군말이 필요치 않다. 누구나 아는 과제를 여기서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출발선에 선 수원 민주시민교육이 어지러운 발자국을 줄여주기를 중심으로 바라기 때문이다.

## 맺음말

어쨌든 조례는 이미 제정되었으므로 이제 실행의 단계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일진대, 민주시민교육도 수원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설계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으므로,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의 첫 발을 내디딜지 필자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모든 절차가 지방선거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고, 선거 결과에 따라 큰 틀에 변화가 올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렵다. 소모적 논란과 공회전을 막으려면, 시와 시의회-시민사회가 협의를 지속하는 방법부터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 협의 채널을 확고하게 확보하고, 진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시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일바시 회원이 한 사람으로서,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훗날 125만 시민의 일상을 민주적으로 바꾸고 다져 나가는 전환점이었다고 평가되기를 기원한다.

종합토론 1

사례로 보는  
수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고민

수원민주시민교육협의회 빛길 | 김 선 영



# 사례로 보는 수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고민

김성연 (수원민주시민교육협의회 빛길)

수원민주시민교육협의회 빛길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학교와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준비모임과 논의를 시작했다. 수원 지역에서는 여러 차례 목적과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거쳐 2014년 수원 민주시민교육협의회 발족하였다. 정기적 회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오며 인권·민주시민·다양성·평등·평화의 분야별 시민교육의 내용을 모으고 정비하여 수원 민주시민교육 과정으로 구성하였고,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육해왔다. 현재 수원YMCA, 수원YWCA, 인권교육센터 온다,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여성회, 경기평화교육센터, 수원희망교육포럼, 수원탁틴내일, 수원시민학교의 9개 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네트워크이다.

‘빛길’은 2015년 올천고, 수일중에서 진행한 동아리 활동의 경험과 평가 이후로 교육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수원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재정비하였고 2017 수원시 청소년육성사업 공모에 지원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함께 행복해지는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였다.

- 일시 2017년 4월 ~ 12월
- 대상 11개 학교 및 기관 (초등 1개교, 중등 7개교, 고등 1개교 및 2개 기관) 청소년

	학교 / 기관	학급 / 동아리	회차	인원	연인원
1	서호중학교	동아리 '민주야놀자'	9회	20명	180명
2	제일중학교	1학년 주제선택활동	3회	25명	75명
3	이목중학교	동아리 '시민토론티'	8회	18명	144명
4	영덕중학교	1학년 주제선택활동1	3회	32명	192명
		1학년 주제선택활동2	3회	32명	
5	창룡중학교	1학년 1반	6회	20명	120명
6	남수원중학교	1학년 주제선택활동	6회	31명	186명
7	광교중학교	1학년 1반	5회	34명	655명
		1학년 2반	5회	32명	
		1학년 3반	5회	35명	
		1학년 4반	5회	32명	
8	수원정보과학고	학생자치회	3회	28명	28명
9	능실초교	5학년 1반	4회	32명	556명
		5학년 2반	4회	32명	
		5학년 3반	4회	24명	
		5학년 4반	4회	24명	
		5학년 5반	4회	27명	
10	희망샘도서관	청소년자원봉사단	2회	24/18	42명
11	매산지역아동센터		2회	5명	10명
			<b>총 85회</b>	<b>525명</b>	(연인원 2,248명)

2017년 수원시 지원사업으로 학교와 결합하여 진행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했으나,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품어온 시민단체와의 연결을 통한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3년여 간 내용구성과 점검의 시간을 통해 단체별 시민교육의 콘텐츠를 민주시민교육으로 구성하고 학교와 기관에서 진행한 경험을 축적한데에 의미가 있었다고 빛길 내부에서는 평가하였다.

이번 사업의 관계자들(빛길, 참여학교 교사, 학생,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 교육청소년과)과의 2017 민주시민교육 평가와 이후 협력을 모색한 관계자 간담회(2017. 2.21)에서 교사들은 연초에 계획하는 학교 일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 학교와 단체의 충분한 사전논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학교나 학급의 관심도·이슈가 반영되어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방안 논의되는 방안을 요청하였다. 참여학생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해보면 재미도 있고 필요성을 느끼지만 선택하고 싶지않은 수업임을 표현하였다. 지원한 동아리에서 밀려서 어쩔 수없이 자리하거나 전혀 상관없는 주제선택활동에 이 수업이 배치되어져 교육자도 학생도 당황스러운 상황들은, 학생을 교육대상자로 머무르게 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에 반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빛길이 고민해온 어려움들은 다음과 같다.

각 단체 일로도 바쁜 활동가들이 고유 업무 외에 가중하여 연구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민주시민교육의 당위성으로 긴 호흡을 함께 하였지만 동력이 따르기는 어렵고 네트워크 역시 느슨할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 활동과 단체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기재가 필요했다.

학교 현장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고 시 지원사업 시행 시기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수업시수·교사·회차 등의 사용 용어가 달라서 오는 혼돈을 비롯하여, 학교 연간 계획이 잡힌 이후에 제안되고 신청받게 되다보니 학교에서는 신청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빛길의 기본계획은 지속성을 담아내고자 15회(2개 교시 연강)를 제시하였으나 학교에서 배치할 수 없는 수업 분량이었다. 그리고 단체의 결합은 일정부분일 수밖에 없고 결국 학교나 가정의 일상에 민주시민의 인식이 이어져야하지만 담보할 수 없는 한계를 느꼈다.

참여자들의 자유의지가 반영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학생들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딱딱함을 선택하고 싶지않다고 하고, 결국 교사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참여하게 되는 형태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낯선 강사에 대한 예의와 호기심을 발휘하였고 수업 후 더 관심이 생겨진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축구나 취미와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선택받을 자신이 없다.

〈참가학생 평가설문지 중〉

〈질문〉 민주시민교육을 마치며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총계	매우 관심이 생김	관심이 생김	그저그렇다	별로 관심이 생기지 않음	전혀 관심없음	무응답
81명	24	42	13	1	-	1
100.0%	29.6	51.9	16.0	1.2	-	1.2

이러한 경험치를 갖고 수원민주시민교육에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필구님 발제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종합예술’이어야 한다고 표현에 적극 동감한다. ‘여러 영역에 산재된 민주시민교육의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시켜야’함을 이야기했다. 여러 시행착오 중에도 빛길의 성과는 분야별로 존재해온 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흐름 안에 재구성하고 함께 검토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과 시도들이 지속화해가는데 시민단체들의 헌신 외에 실질적이면서 긴 호흡의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두 발제 모두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였다.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늘 거론되지만 아름다운 거버넌스의 예를 잘 들어보지 못했다. 2년전 민주시민교육조례 발의에 대해 토론하면서도 협력과 토론의 장이 이어져야 함을 제안했으나 올해초 제정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한 것이 전부였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결국은 주체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성을 경험하고 쌓아가는 것이다. 이후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이 원칙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지켜지기를 바란다. 민간과 행정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부터가 거버넌스의 시작이 아닐까 한다.

결국은 민주시민교육이 전분야에 걸쳐 필요하고 녹아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합의를 이루고 실천하는 것이 일상 속에 자연스러운 방식이 되어야 한다. 특별교육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는 것, 우리 사회에 필요성이 함께 인식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원의 민주시민교육으로 인식되어지는데 조례와 거버넌스와 그간의 경험들이 잘 연결되고 존중되기를 바란다.



종합토론 2

#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수원희망교육시민포럼 대표 | 송 준 호



#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송준호 (수원희망교육시민포럼 대표)

- 시민교육의 필요성
- 시민 주권 의식 함양
-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회의 통합
- 현대사회의 대안적 시민성

## 1. 안정적인 시민교육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체계 구축

- 수원시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 제도의 마련과 정책 및 예산 수립
- 민주시민교육 전담 기관 설치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네트워크 조직 구성
-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
- 수원시, 수원시의회, 수원지역 시민사회, 학계 · 전문가 그룹등

## 2. 민주주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수원형 민주시민교육 표준 실천모델 창출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 · 개발
- 민주시민교육 저변 확대 · 심화 위한 참여형 공모사업 및 목적 사업운영

## 3. 시민교육을 추진 하는 민간단체 지원 방안 마련

- 지역 사회 주체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 민간 공모사업
- 시민교육 주체 인력 양성

## 4. 민주시민 교육 전문성 확보

- 지역사회 다양한 시민교육 사례 발굴 및 지원
- 공동의 표준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5. 수원시 민주시민교육의 단계적 추진 전략 수립

### - 기반조성

- 1)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사례를 발굴 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활동이 되도록 지원 체계 확립

### - 확 산

- 1) 수원시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방재정확보
- 2) 행정체계 재정립의 필요(담당부서의 신설)

### - 안정화기

- 1)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 마. 맺음말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정치 체제나 사회 체제에 참여하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시민성을 갖도록 안내 하는 교육 과정이다.

이러한 생활속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간 공모사업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지역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의 역할 증대 방안 마련이 이루어 지길 기대 한다.

종합토론 3

# 성남시 민주시민교육 사례 및 제언

성남민주시민학교 공동대표 | 오 세 창



# 성남시 민주시민교육 사례 및 제언

오세창 (성남민주시민학교 공동대표)

## 1. 성남지역의 다양한 사례

### 가. NGO

1987년 체제 이후 성남지역의 제반 NGO는 자기 단체의 특화된 사업의 영역으로 비정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시민교육을 진행해 왔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의정지기단 활동과 주민참여예산 등의 활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과 성남환경운동연합의 환경교육, 성남평화연대의 노동·인권 교육, 성남 여성의 전화의 성평등·여성인권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 나. 성남민주시민교육지원네트워크

2013년 경기도 교육청 민주시민 교과서 발행과 함께 지역 교육청 단위로 만들어져 학교 외부강사로 학생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일정 부분 진행해 왔으며 소속 단체회원대상 '민주시민교육관련 연수와 워크숍' '청소년 의회교실'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자치를 주제로 4시간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교육희망포럼 소속의 단체들의 대부분은 2015년 초 경기도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제정을 계기로 지역교육단위의 지역 민주시민 네트워크에 다양한 형태로 직, 간접적으로 참여 하여 활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성남은 성남형교육지원 단과 성남청소년재단을 통해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 다. 성남시 평생학습원

성남시 평생학습원은 외부 교육기관 위탁계약을 통해 상·하반기 시민대학의 일환으로 민주시민소양교육을 주로 진행해오고 있다.

### 라. 교육관련 단체

성남창의교육시민포럼은 정기적 시민역사교실과 교육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학부모 대상의 강좌를 개설하여 진행하였고, 성남형교육네트워크는 지역의 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주민사업의 형태로 진행하였고, 오늘날도 행복한 청소년은 성남국본과 18세 청소년 참정권 토크 콘서트, 청소년 재단과 청소년정치 참여 행복토크콘서트 등, 고등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였다.

#### 마. 지역 복지기관, 도서관과 강사협동조합

지역의 다양한 복지시설(복지관, 센터 등) 내 시민교육을 지역의 강사협동조합 등을 통해 특화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성남사회복지사협회는 자체 내 복지관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였다.

#### 바. 성남민주시민학교

2015년 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성남 민주시민교육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구성하고 시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의 기초단체 민주시민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성남시의 협의를 거쳐 제1기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사 기초과정(60시간)을 개설하여 70여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이 중 30여명의 수료생으로 성남민주시민학교를 2016년 4월 19일 창립하게 되었다. 성남민주시민학교는 성남지역의 사회복지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관련 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관련 개선 과제에 대한 교육(찾아가는 시민학교) 매뉴얼 제작, 경기 동부권 교육활동가 워크숍, 성남지역 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강좌 운영(시민교육 성남협의회 준비)을 하였고, 민주시민교육 관련 스터디를 진행 중이다.

#### 사.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는 지역의 복지회관과 연계해 비정기적 청소년교육을 진행하였고 올해부터 민주시민교육의 일상적인 전개를 계획하고 있다.

## 2. 시민교육과 관련한 연대

가. 성남민주시민학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 사업을 통해 시민교육사 1기 심화교육 및 지역 시민교육관련 단체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강좌 ‘시민으로 산다는 것’을 개설(총 8강)하여 진행하였으며, 이 사업에는 지역의 가르침과 배움의 협동조합 성장과 비전,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성남창의교육시민포럼, 오늘도 행복한 청소년, 책이랑 도서관 단체가 함께 하였다.

나. 위 참여한 단체의 구성원들과 시민교육에 대한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공유를 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연대를 위해 [시민교육 성남협의회]를 준비하기로 했으며 지역의 연대를 모색하면서 참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성남지회와 (사)더불어 사람, 성남여성의전화가 함께하기로 했으며 2018년 1월 31일 위 9개 단체를 중심으로 성남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지방의 자치분권에 기반한 교육공동체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교육성남협의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다. 성남민주시민학교는 성남국민운동본부와 협의를 통해 대선공약 관련 성남시민평의회를 주관하여 진행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또한 모색하였다.

라.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주무부서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역량과 주체를 세우지 못하면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포럼,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시민교육성남협의회가 경기민주시민교육협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내 시민교육센터를 만들고 이를 운영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3. 제언

가. 성남지역의 다양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시민교육은 특화된 형태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과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방향과 원칙 등에 대한 합의의 도출과정이 연대를 통해 필요하다. 우선은 민주시민교육 강좌운영 경험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 지역의 제반 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단체와 개인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원시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성남은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교육사 양성과정이 이후 시의회의 예산 전면삭감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은 예산 지원의 근거이며 이후 시의원과 도의원, 시정부와의 지속적인 교감과 토론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적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로드맵과 예산 집행이 예상되므로 지역 내 민주시민교육센터(혹은 연구소)를 지역 내 교육협의체를 통해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도(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경기도의원, 각 지역 시의원,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지역의 교육역량,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와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3개년 종합계획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추진, 자문위원회를 심의 자문기구로 국한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심의, 의결기구 화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민주시민교육 담당부서가 대부분 평생학습원이 담당하는데 독립적인 민주시민교육 담당기구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민관 협력이 가능하도록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

다.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과 시민 대상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색과 통합적인 비전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성남지역만 보더라도 지역 내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 예정이다. 그러므로 시민대상의 교육대상과 내용을 어떻게 하면서 특화된 형태의 다른 영역과 연계성

을 어떻게 가지는 것이 주요할지 공유해나가야 한다. 특히 자치분권이 주요하게 대두되고 마을과 도시재생이 주요한 의제가 되는 현 상황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진행되어야 하는 지가 중요하다.

#### 4. 시민교육성남협의회와 민주시민교육 계획

- 가. 우선 성남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연구, 개발하고 활동가를 양성하며 제도 정비를 위한 지역내 플랫폼으로서 (사)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부설 성남시민교육원을 4월~5월 중에 설립 예정이며 이 시민교육원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성남협의회 활동가들의 전면적인 결합을 준비 중에 있다.
- 나. 성남지역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경험을 축적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원칙과 방향 등 시민사회의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성남사회복지사회, 복지기관 등 사회복지 부문, 마을만들기 사업 등 마을 사업부문(책이랑 도서관), 시민교육활동가 양성 등 성남민주시민학교, 학부모 중심의 교육단체(성남창의교육시민포럼, 참교육성남지회), 인문학 중심의 학습공동체(성장과 비전, 더불어 사람), 특화된 영역의 시민사회단체(성남여성의 전화), 청소년 교육 등 오늘도 행복한 청소년 등 다양한 영역의 민주시민교육의 공동 사업과 포괄 가능한 사업을 성남시민교육원 중심으로 확대한다.
- 다.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여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활동가 양성(마을과 시민, 복지)과 민주시민 소양교육을 병행하면서 성남지역의 시설과 인프라(전문가, 활동가 등)를 구축하여 장기적 비전을 마련한다. 2018년 성남시 민주시민교육 예산은 소양교육(2,000만원), 심화교육(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이다. 지방정부의 민주시민교육 예산을 점차 증액하여야 한다.
- 라. 지역의 시민사회 연대체와 공동으로 지역의 숙의민주주의의 발전, 토론문화의 활성화, 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해 시민평의회와 같은 시민사회의 토론회를 정기화하고 제도적 정비를 위한 시의원, 도의원,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종합토론 4

# 민주시민교육, 이제 민주시민학습으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 김도영



# 민주시민교육, 이제 민주시민학습으로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한국교육을 본 받아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교육 예찬론을 펼쳤다는 언론에서 앞다퉈 다룬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10년 동안 영어공부를 해도 외국인 앞에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린다고 비판받는 한국교육을 본받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음가짐과 교육습관, 교육열을 본받으라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다만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이론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창의력을 높이는 교육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입시제도와 함께 고민되지 못하는 교육방법의 전환은 선언적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다르다.

민주시민교육은 입시제도와는 별개로서 현재의 이론전달 중심의 교육을 틀을 벗어나기 수월하다. 다만 우리의 사고 속에 존재하는 이론전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살펴보면 민주시민교육은 “수원시민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생활을 하여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을 건강한 시민으로의 정치생활, 성숙한 삶의 추구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함양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6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한다고 하고 있다. 분명 이론전달식 입시교육과 같은 고정관념을 깨야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토론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수원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우려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 때문일 것이다. 교육은 사전적 의미로 지식을 가르치고 품성과 체력을 기르는 의미한다. 즉 학습자가 수동적인 입장이다. 학습의 사전적 의미는 배워서 익힘을 의미한다. 교육과 유사하게 인식되지만 교육보다는 능동적인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 직접 대안을 모색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가장 큰 학습이다.

협치는 민-관 협력이다. 민 그리고 관이 협력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민과 관 사이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세분화되어 있다. 일반시민-공동체조직-시민단체(혹은 시민사회)-관변조직-중간지원조직-행정 등이다. 이 중 무관심한 일반시민 보다는 조직화되어 있고, 참여의지가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학습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참여시민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학습도 중요한 지점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통장, 아파트입주자대표를 학습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학습의 방식으로 문제중심학습(PBL)을 채택하였다. 문제중심학습은 학습자가 학습목표와 주제를 직접 선정하고 학습과정에서 문제파악, 문제원인 분석, 원인해결책 모색, 해결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 등을 학습기간 중에 이루어내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이자 모형이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주민세 인상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직접 학습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학습자 스스로 학습과정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시점에 교체대상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주민자치회의 전환방향을 학습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학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시선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이론교육이 더 주요한 교육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은 합리적인 주민자치회 전환방식을 제시하였고, 이 학습결과는 책자로 만들어져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과정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이어지는 것은 학습기간 동안 학습자가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형태의 방관이 아닌 체계적인 학습과정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가령 문제의 원인파악을 위하여 일반시민, 공무원 등이 주민자치위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역발상 토론, 주민자치회 전환방향에 대한 정부정책의 학습, 타 사례의 현장탐방 등을 종합하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나가는 일련의 학습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 간의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도 실증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자치대학 수료생들은 교육과정을 연극으로 구성하여 공연도 하였다. 그 결과 18년 2월 간부회의에서 앵콜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PBL 교육 경험으로 2018년은 산하 기관 등 중간지원조직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 공무원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접수되어 준비 중에 있다.

수원시의 소중한 민주시민학습의 경험적 자산을 체계화하고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단순한 이론전달 교육을 넘어선 민주시민학습은 이미 수원시민자치대학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 수원시 전체가 학습장이 되는 발전된 학습모델 기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앞으로 기대되는 대학생활에 대해 물으면 누구나 하나쯤의 환상은 지니고 있다. 그 것이 어떤 모습이든 보통은 드넓은 캠퍼스에서 펼쳐지는 무엇인가를 꿈꾸곤 한다.

최근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대학이 나타났다. 물리적으로 정해진 캠퍼스 없이 학기마다 전 세계 주요도시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듣는 미네르바스쿨이다. 2014년 개교 이래 현재 5기 신입생 모집 중인 이 과정은 400명 가량의 수강생을 뽑는데 지원자가 2만 5,000명이다. 3기 지원자 만 6천 명, 4기 지원자 2만 천명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미네르바 스쿨의 재학생은 4개월마다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베를린, 런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전 세계 7개 도시를 옮겨 다니며 공부한다. 2017년 9월 서울을 찾아 4개월 동안 네이버, SAP코리아, 소프트뱅크벤처스 등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현재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활용하는 학습방식도 바로 PBL이다. 또한 스페인의 몬드라곤아카데미(MTA) 또한 유사한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드넓은 캠퍼스와 강의실, 대학교수가 있는 대학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탈중양화가 대학교육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실험은 비단 대학교육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 시부야에서는 논다, 배운다, 만든다는 교육목표를 통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전체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부야대학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와 자매학교 등을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이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수원시 전체가 학습장이 되는 교육을 수원시에서도 실현가능하다. 수원시는 2011년부터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었고, 주민참여예산,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 좋은시정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도 눈에 띈다. 이러한 가시적 성과는 수원시 곳곳에 존재하며, 현장에서 사례스터디와 사례별로 주어지는 미션을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PBL 방식이 결합된 교육이 추진될 수 있다. 수원시민자치대학에서도 현재 이러한 교육에 대한 고민이 진행 중에 있고,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의 틀이 공개되기를 희망해본다.

## 수원시 민주시민교육의 블랙홀이 아닌 플랫폼으로

민주시민교육은 수원시민자치대학에서만 진행하는 학습이 되어서는 안된다. 수원시민자치대학은 새로운 학습모델의 개발, PBL 등 문제중심학습의 경험적 자산 축적, 수원시의 다양한 거버넌스 정책의 실제 접목 등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에서의 여성, 양성평등, 노동 등에 대한 고민, 교육경험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지점들은 수원시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이러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학습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현장에서의 경험과 성과는 자발적 주민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행정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모두 수행하는 형태는 민주시민교육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히 교육을 실행하는 것 이외에도 민주적 시민사회의 확산과 건강한 민주시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시민단체와 주민조직을 상호 연계, 지원하는 중심조직이 필요할 뿐이다. 이 조직이 바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수원시 민주시민교육은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평생학습관의 다양한 시민교육 경험과 전국적 네트워크, 물리적 교육환경 등도 함께 포용하여야 한다. 평생학습관이 민주시민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 수원시민자치대학의 경험 또한 존중되고 연계되어야 한다. 이 것이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그리는 수원시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일 것이다.





